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와 극단주의의 위협 - 자유주의, 사민주의의 역사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극우' -

1. 서론

일찍이 막스 베버는 가치다원적인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마치 '신들의 전투(Kampf der Götter)'처럼 격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Weber, 1988[1919]: 604-5).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와 적대성이 심화되면서 세속의 현실을 둘러싼 다툼이 선악의 성전(聖戰)처럼 되어가고 있다. 각기 다른 믿음과 이상을 가진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이 흡사 종교전쟁과도 같은 믿음들의 충돌로 치닫는다. 이러한 문화적 긴장은 최근 다시금 격화되어, 예컨대 미국인들의 정치적 태도는 지난 수십 년 간 점점 더 확고하고 상호적대적으로 되어서 이제는 트럼프 지지층과 반대층 간에 건널 수 없는 심연(深淵)이 패였다. 유럽에서도 급진 우파 세력이 십여 년 사이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이들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전통적 좌우, 중도 세력과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가치, 신념, 정치적 태도, '좋은 사회'에 대한 관념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갈라서고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여러 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일반적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한국의 상황은 거기에 더하여 특수한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오랜 독재로 인해 갈등과 차이를 다루는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정치엘리트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와 헌정, 보편적 인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담론과 세력이 확대되는 현실이다. 이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공격하며, '평등'이 마치 공산주의의 전유물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극우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긴급하다.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현대 사회체제와 제도원리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전통인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고, 두 전통 모두 자유와 평등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공통의 보편적 가치로 강조하였음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두 이념의 역사적 변천과 실제적인 정치적 구현 양상을 고찰하여,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각각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적 평등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서술한다. 4장과 5장은 한국에서 군사독재부터 뉴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 극우'의 담론과 논리가 어떻게 자유와 평등 모두 파괴하는 허위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한국의 공론장과 정치담론에서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변천을 양적,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5장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독재와 국가폭력을 정당화한 논리구조를 규명한다.

2.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의 이념

1) 자유주의의 이념적 요소

오늘날 세계적으로 극단주의 우파 세력이 자신들의 신념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법적, 도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다. 트럼프, 윤석열 등 많은 권위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순적이게도 '자유'를 외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과 정치적 경쟁자들을 '자유의 적'으로 비난했다. 그러한 정치적 수사들은 현대에 자유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장 심오하게 통찰한 이념인 자유주의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자유주의의 역사를 다루는 문헌들은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탄생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세계로 확산된 자유주의 이념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반복해서 언급한다. (a) 자유라는 가치의 절대적 우선성과 만인의 평등한 자유권에 대한 믿음, (b) 개인의 자율성의 권리와 능력을 중시하는 관점, (c)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지배 옹호, (d) 개인들의 선택과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자생적 질서'에

대한 신뢰 등이다. 자유주의-사민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강조할 점은 다음과 같다.

(a) 자유주의 사상에서 자유가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자유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 영국 자유주의 전통에서 자유의 본질은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를 자유”, “다른 누군가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을 자유”(Locke, 1988[1689], II, §§ 22: 13-15)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상, 감정,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정당한 입법적 권위를 창출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 정치참여의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경제적 사익추구는 자유주의 인간학의 핵심이 아니었다. 그리고 개인은 자연적 자유의 권리를 갖지만, 그 자유는 또한 모든 개인의 평등한 자유, 즉 ‘사회 속의 인간의 자유(Liberty of Men in Society)’여야 했다.

(b)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은 자유주의 사상의 또 하나의 핵심적 가치다. 자유주의는 ‘집단 개념의 물신화’에 의해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점을 중요시했다(Infantino, 1998). 그러나 이때 개인은 서로 고립된 원자적 존재, 시장 행위자, 재산권 행사자를 뜻하지 않는다. 아담 퍼거슨은 동물이 본능에 따라 단순한 군집을 이루는 데 반해 인간은 “연합하고 정치적인(Associating and Political)” 존재며, 각 개인의 정치적·도덕적 의지에 따른 연합이 사회를 가능케 함을 강조했다(Ferguson, 1995[1792]: 22-24). 개인성은 사회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c) 권력은 언제나 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고 따라서 견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핵심 중의 하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력과 자유를 단순 대비시키는 오류다. 권력의 남용은 자유 일반의 반대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한받지 않는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권력남용의 견제는 곧 만인의 자유를 위한 자유의 제한이다. 몽테스큐는 《법의 정신》에서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법’이 모든 개인의 자유 위에 정당하게 세워진 법이어야 하며, 어떤 권력도 것처럼 동화된 입법의 권위보다 더 상위에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국가적 권위와 역할을 증시하는 ‘법치국가(Rechtsstaat)’ 이념과 미묘하게 구분된다(Barber, 2003). 또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제도적으로 양자가 긴장관계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도 남용될 수 있는 권력, 따라서 견제되어야 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d) 질서에 대한 자유주의의 전통은, 누군가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서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서가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와 같은 개념이 그런 믿음을 응축한다. 1767년 퍼거슨의 저작(Ferguson, 1995[1767])에 등장한 자생적 질서의 관념은 2백년 뒤 하이에크의 저작에서 부활한 뒤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이처럼 되었다(Hayek, 1994[1963]).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자생적’ 질서의 관념은 개인들의 자유만으로 ‘자동적’ 질서가 생겨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들이 ‘지성’, ‘사려’, ‘선택’, ‘책임’을 통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했다(Ferguson, 1995[1792]: 152-162). 하지만 그들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그 반대의 가능성도 읽어냈다. “모든 ‘선의’는 위선일 뿐이고 … 우리는 모두 결국 사익을 추구할 뿐”이라는, “시민적 덕성과 공존 불가능한”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 말이다(Hume, 1957[1748]: 113).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가 곧 도덕적 사회를 가능케 한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어떻게 공동선을 구현할 것인가, 어떤 자유가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씨름한 것이다(Brühlmeier, 1996).

이상과 같은 자유주의 이념의 핵심 요소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인간과 사회의 이상형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세계를 완전히 개조하려는 극우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상반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중시, 법의 지배에 대한 강조는 극우주의자들이 적대시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다.

2) 사민주의의 이념적 요소

그렇다면 현대의 정치 이념 가운데 평등의 가치를 가장 강하게 주창했던 사회민주주의는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자유’의 적인가, 아니면 단지 정치적, 전술적 이유가 아니라 그 이념에서 ‘자유’의 신봉자들인가? 사민주의는 17~18세기에 탄생한 자유주의를 선택적으로 계승한 토대 위에서,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와 계급갈등,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반영하는 이념들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사민주의는 (a) 모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고, (b)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c) 그 목표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d) 민주주의가 단지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고 믿는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했다.

(a) 먼저 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인 자유의 가치, 개인의 자율성, 전제주의에 대한 반대가 사민주의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독일의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토마스 마이어는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지상주의라는 상반된 이념이 모두 17~18세기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Meyer, 2009: 103). 자유주의가 사민주의의 유일한 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해석은 과도하지만, 자유주의가 사민주의의 '하나의' 뿌리임은 분명하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민주의는 17세기에 탄생한 자유주의 정신이 이미 한 세기 이상 퍼져나간 역사적 배경 위에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사민주의는 자유·공화·민주주의와 완전히 별개의 이념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하면서 고유의 형태로 종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b) 평등과 정의는 사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며, 자유와 민주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의 대부분의 정치사회 이념이 그러하듯 사민주의 역시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정식화된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계승,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각의 가치에 부여되는 상대적 위상은 다양하다.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제1의 원리로 하여 그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 '평등'이 무엇인가가 도출해낸다면, 사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갈 때에만 자유의 구현도, 평등의 구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관념"(곰베르트, 2012: 37)이 사민주의를 자유주의와 구분 짓게 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거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물론 포함하지만, 사민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마찬가지로 중요시하며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의 평등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허구라고 생각한다.

(c) 국가가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나아가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사민주의의 또 하나의 전통이다. 19세기 독일 사민당 지도자였던 라살레(Ferdinand Lasalle)는 개인들이 연합하여 사적 세계를 넘어서는 윤리적 전체를 형성한 것이 바로 국가며, 개인들은 그러한 연합을 통해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높은 "교양과 권력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Lassalle, 1919[1862]). 오늘날 종종 자유주의 국가 관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야경국가'라는 말은 라살레가 자유지상주의를 조소하면서 사용한 용어다. 위에 서술했듯이 자유주의는 정부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지만, 사민주의가 국가에 부여하는 위상은 자유주의보다 훨씬 높다.

(d)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를 위해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본질적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사민주의의 정치이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개념으로서 사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각각 부르는 두 세력의 결정적 차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체제이행 전략의 급진성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치에 어떤 가치와 위상을 부여하느냐다. 사민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민주의의 목표이자 근본가치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자본주의를 넘어선 체제의 중심 요소라고 믿는다(Esping-Andersen, 1985, 특히 서론).

3)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이념의 관계

역사적 구성물로서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서로 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유주의는 이미 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만인의 평등한 자유, 사회 속의 자유, 개인의 본원적 사회성, 시장의 도덕적 위험, 사회의 자기규제의 한계 등을 중요시해왔다. 그래서 이후 자본주의의 파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자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와서 자유주의는 평등의 가치와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변모했다. 한편 사민주의의 이념적 개방성과 유연성은 자유주의와 다른 이유에서 높았다. 사민주의는 독립적 이념체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념을 포용하는 사회적 가치이자 정치 노선이다. 로크, 몽테스큐, 칸트, 루소, 마르크스가 모두 사민주의의 이념적 원천이다. 사민주의는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다채로운 인류의 사상적 유산을, 교리가 아닌 가치로서 수용했다. 빌리 브란트가 1987년에 26년 간 맡았던 독일 사민당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했던 고별 연설의 제목은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택하라!"였다.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간의 이와 같은 상호 개방성과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양자가 마치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이념체계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해하다. 것처럼 뭉뚱그려진 대립의 가정은 좌우의 양쪽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좌파들이 1980년대에 부상한 시장주의자들에게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미 188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진보적인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는 사실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그와 반대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모두 ‘공산주의’와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극단 우파들은 3세기 가까운 자유주의의 역사 속에서 만인의 평등한 존엄과 사회적·도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 중심에 있어왔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3.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의 역사적 변천과 혼합

앞에서 자유주의 이념의 핵심 요소로서 자유, 개인, 법의 지배,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을, 그리고 사민주의 이념의 핵심으로 자유, 평등과 정의, 국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꼽았다. 구체적 시공간에 실재하는 역사적 자유주의, 역사적 사민주의는 이상의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특정한 가치 위계로 결합시켰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나 사민주의의 역사는, 앞으로 꽃을 피울 모든 요소를 이미 갖춘 어떤 기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직선적 진보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다양한 시대와 사회 상황에서 탄생한 이념적, 제도적 요소들이 생명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들 간의 위계관계 또는 중심/주변 관계가 여러 방향으로 굴절되어 온 곡선의 과정이다.

1)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화

자유주의의 역사에 대한 많은 문헌은 ‘구(舊)자유주의’와 ‘신(新)자유주의’ 시기를 구분한다. 구자유주의는 중세 권력이 아직 강력하던 17~18세기에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기규제 능력을 강조하던 초기 자유주의 사상이다. 이후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훗날 ‘수정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이 사상운동은 산업혁명과 1848년 유럽혁명, 19세기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20세기 초 대공황의 충격과 같은 정치사회적 격동에 대한 반응이었다. 영국의 철학자 밀(John Stuart Mill), 경제학자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사회학자 홉하우스(Leonard Hobhouse), 미국에선 듀이(John Dewey)와 같은 진보주의(Progressivism) 지식인들이 이 조류를 대표한다. 미국에서는 바로 이 자유주의 혁신기, 즉 1890~1920년대의 ‘진보주의 시대’, 1920~30년대의 대공황과 뉴딜을 거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이 ‘리버럴’이라는 명칭을, 구자유주의 세력이 ‘보수’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1950~60년대가 전후(戰後) 복구를 위한 국가 주도의 시대이자 자본주의 황금기의 복지국가 시대였다면, 1970~80년대에 대처, 레이건의 집권과 더불어 자유시장주의와 최소국가론, 때론 시장만능주의와 소유권절대주의를 표방하는 강력한 흐름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는 프리드먼, 하이에크처럼 정부의 역할을 정밀하게 이론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존재이유를 아예 부정하는 아나키스트도 있고, 정부의 최소한의 정당성만 인정하는 ‘미나키스트(minarchists)’도 있다(Gordon, 1987). 오늘날 많은 이가 이들을 가리켜 ‘신자유주의’로 부르며 비난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은 이들이 스스로를 지칭한 용어는 아니다.

자유주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보통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보지 않는 사회체제 안에 각인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발견하게 된다.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자유주의는 종종 잔여복지(residual welfare) 체제의 이념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자유주의가 강조해온 평등주의와 개혁주의는 북유럽과 대륙유럽의 복지국가 발전에도 토대를 제공했다. 북유럽에서는 개인주의 문화 전통도 복지국가와 연결되어 ‘개인주의적 국가주의’라는 조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Trägårdh, 2007).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큰 틀의 연대는 조합주의나 소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토양 위에서 커나갈 수 있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는 자유주의 전통을 사민주의로 보완하여 성공을 거둔 경제모델의 예다. 이들은 자유방임도 통제경제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했는데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자유경쟁을 위해 국가의 헌법적·규제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Goldschmidt and Wohlgemuth, 2008). 이 이론이 훗날 사회적 형평(sozialer Ausgleich)이라는 사민주의 가치와 결합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인데, 1950년대에 서독 기민련은 이를 경제 모델로 채택했고 사민당도 나중에 이를 수용했다(Enste, 2006; Müller-Armack, 1978). 이처럼 자유주의는 사회적, 도덕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했고, 자유시장주의를 극단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했으며, 사민주의 제도에 섞여들기도 했고 사민주의적 요소를 흡수하며 새로운 모델로 변형되기도 했다. 자유주의의 역사는 한 결이 아니라 여러 결인 것이다.

2) 사민주의의 역사적 변화

사민주의의 역사도 그것의 다양한 이념적 요소들의 위상 변화, 그리고 변화하는 역사적 현실과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었다. 유럽에서 근대적 사회주의 사상은 사민주의가 정립되기 훨씬 이전인 18세기의 루소, 생시몽, 푸리에 등의 저작에서 비록 맹아적이지만 강렬하게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독립적 이념이자 정치 노선으로서 탄생한 것은 1860~70년대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전국적 노조연합체와 노동계급 정치조직이 설립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유럽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줬지만, 정치이념이자 정치운동으로서의 사민주의 발전과정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사민주의 정치가 마르크스 사상의 교리화·교조화를 거부하고, 실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국가를 운영하려는 목표를 향한 현실주의 노선을 지향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19세기말~20세기초 독일 사민주의 지도자들은 혁명을 통한 이행보다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한 체제 이행을 선호했다. 카우츠키와 베벨은 조직된 노동계급이 의회 다수를 점유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관점은 자본주의 붕괴론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로의 진화를 내다보고 있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개혁주의, 점진주의가 사민주의의 정체성인 것으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독일 사민당은 이미 1890년에 제국의회 선거에서 19.8%를 얻어 정당 중 최다득표를 했고, 1898년에는 27.2%, 1912년에는 무려 34.8%를 얻었던 것이다. 사민주의자들은 이 당시 확고한 사회주의자였고, 다만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만큼 중요하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달랐다. 실제로 그들은 의회를 통해 국가권력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 점에서 1920~30년대는 사민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사민주의자들은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정권을 쥐었고, 그와 동시에 1917년 혁명 후의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분명히 결별했다. 독일에선 1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어 의회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성됐고, 사민당 정치인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 결합하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보편적 사회권과 국가의 평등주의적 역할을 헌법에 도입했다. 사민당이 통치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32년에 나치에 의해 붕괴되었지만, 흥미롭게도 바로 같은 해에 스웨덴에서는 사민당이 집권하여 그 후 40년 넘게 한 번도 실권하지 않았다. 바로 다음 해인 1933년에는 미국에서 제1차 뉴딜이 시작되어 194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은 물론 국가조직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차 대전 후 사민주의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는다. 많은 사민주의 정당은 반(反)자본주의, 노동계급 중심성, 국가중심주의를 약화시키고 정치경제적 현실에 적응을 시도했다. 독일은 그런 전환이 뚜렷했던 사례인데, 1959년 고테스베르크 당대회는 생산현장의 권력 증대와 물질적 분배 개선을 여전히 표방하면서도, “최대한의 경쟁, 필요한 만큼의 계획”을 모토로 반(反)경쟁적 계획경제론과 결별했고 이념·가치의 관용성을 높여서 다양한 성향의 유권자층을 끌어들이려 했다. 이 전환은 자본주의와 선거정치 현실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양면적이었다. 한편으로 1960~70년대 브란트·슈미트 총리의 사민당 정권이 이 전환의 성과였다면, 1990년대 ‘새로운 중도(Neue Mitte)’ 이후 사민당의 몰락은 이념적 정체성의 해체가 갖는 위험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사민주의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긴장관계가 있어서, 역사 속에서 양자는 각기 다른 균형으로 접합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제2절의 논리적 고찰과 제3절의 역사적 고찰에서 우리는, 현대의 사회체제와 정치노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이념인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모두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매우 중시했으며,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의 지배, 기본권과 같은 보편주의적 원리에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했음을 보았다. 따라서 평등의 가치를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와 연결시켜서 공격하거나, 자유의 성전(聖戰)이라는 명분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현대 세계의 이념사와 정치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선전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담론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언제나 동일한 뜻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적 층위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화해 왔다. 그러한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첫째, '정치체제 유형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한 형태를 가리키며, 이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등 비민주적 체제와 대비될 뿐만 아니라, 선거와 다당제, 기초적인 정치적 기본권만을 갖춘 선거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둘째,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뜻하는데, 두 요소는 논리적, 정치적으로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 그리고 양자의 결합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구별이 가능하다. 셋째, '정치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실제 제도나 이념을 기술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자가 정치적 실천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아 발화하는 언설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체제나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그것을 왜곡하거나 거기에 대립되는 가치와 목적을 함축할 수도 있다.

일례로, 오늘날 정치체제론이나 비교민주주의 연구에서 'liberal democracy'라는 개념은 선거, 다당제, 기초적인 정치적 기본권을 갖춘 체제를 뜻하는 'electoral democracy'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여기서 'liberal'은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권력분립의 제도화, 포괄적인 시민적 자유, 차별 없는 보편적 기본권의 보장 등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liberal democracy'는 '헌법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와 거의 동일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에 반해, 국제적 냉전 체제에서 '서방' 진영 이데올로기의 핵심 상징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그것과 매우 다른, 심지어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자유'의 영어 용어는 'liberal'보다는 'free'였는데, 소비에트-공산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일체의 것을 'free', 'freedom', 'free world', 'free economy', 'free peoples'로 묘사하곤 했다(Gould-Davies, 1999; Medhurst, 1997).

우리는 이상과 같은 세 차원의 구분을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적, 정치이념적 실질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던 오랜 시기 동안에, 정치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언제,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어떤 의미로 발화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중성과 역동성

먼저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1920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아카이브를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사용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복합어는 1960년 이전까지 매우 드물게 등장했다. 그런데 그 출현 빈도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0년대 초, 그리고 1972년 유신 직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무엇보다 1983~87년 전두환 정권기에 뚜렷하게 상승했다. 이는 이 용어가 민주주의의 확대 시점보다 오히려 독재의 개시·강화 국면에서 더 자주 호출되었다는 역설을 말해준다. 이것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언어였는지, 아니면 독재에 저항하는 유토피아의 언어였는지를 알려면 기사 텍스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적 분석에서 '자유민주주의' 단어의 빈도가 증가한 시기의 기사들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식민지 조선 또는 한국의 언론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대체로 영국식 의회정치, 프랑스 계몽사상, 미국식 선거제도, 개인의 권리 보장 등 서구의 정치사상과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예외적으로, 1940년 기사에서는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는 좌파적 해석이 발견된다. 그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1960년 4·19혁명 국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반독재 민주화의 가치와 연결되었고, 1963년에는 군정 종식과 민정 이양을 뜻하는 '국시(國是)'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1972년 소위 '유신'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담론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조치와 독재를 정당화하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웠고, 이때부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억압을 미화,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이중성과 역동성을 본다. 한편으로 이 용어는 선거, 투표, 개인의 권리,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근대 정치이념이자 민주적 정치체제의 이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동일한 단어가 독재체제의 정당화, 반공주의적 사상통제, 반대세력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이 역설 또는 모순은 단지 사상적 또는 이론적 개념 이해의 혼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담론적 정치투쟁, 또는 정치적 담론투쟁의 핵심을 형성했다. 유신체제는 '자유민주체제'라는 표현을 통해 독재 강화를 정당화했고, 1980년 전후의 보수 언론 담론은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묘사했다. 반면 광우항쟁과 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으로 이해했다. 즉 동일한 기표를 둘러싸고 지배와 저항의 담론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2)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극우' 담론의 증가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반공반북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토대는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 지속과 변화를 함께 겪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독재 종식 후에도 건재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1970~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주역들이 한국 정치와 공공기관의 중심부로 빠르게 복귀한 데서 입증됐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은, 정치 민주화와 자유화에 따라 구체제의 옹호 세력, 또는 진보주의의 반대 세력들은 새롭게 사회중심부로 진입하는 진보 세력과 항구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합 관계의 역동적 전개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다양한 혁신 시도가 일어나는데, 그중 어떤 이는 반공반북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려 하고, 어떤 이는 자유시장주의를, 어떤 이는 보다 세련된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어떤 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결합시키려 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 한국 보수가 "밖으로는 정권 상실, 안으로는 이론적 공허함이라는 이중적인 위험"(이한우, 2005: 142)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보수우파의 이념적 재활성화와 반격이 활발해졌다.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공론장에 대한 양적 분석은 흥미로운 추이를 나타낸다.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신문검색 프로그램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1990~2023년 언론보도를 분석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좌파', '종북', '공산', '친북' 같은 단어와 함께 동일한 기사 텍스트에 등장한 빈도는 민주화 이후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이 집권한 2022년 이후에 그 빈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관련 연간 추이 그래프와 개념 관계도는 이 용어가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국민의힘, 새누리당 등 보수·우익 정치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언론매체 간에 비교를 하면, 보수 성향 신문일수록 '자유민주주의'를 반좌파·반북 담론과 결합해 더 자주 사용한 반면, 진보 성향 신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각각 보수 언론보다 더 자주 사용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복합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공론장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중립적 제도 개념이라기보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이념이자, 지배이데올로기이며, 또한 저항담론이기도 했다. 그것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 누가 담론과 정치의 헤게모니를 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유동하는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단지 개념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실질, 국가 정체성, 반공주의, 시민권,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둘러싼 지속적 해석투쟁인 것이다.

5. ‘뉴라이트’와 자유민주주의 극우의 반자유, 반평등

1) 뉴라이트의 극우화와 권력화

앞에서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 반대파를 ‘북한’, ‘좌파’, ‘공산’ 등 적대적 대상과 동일시하면서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추이를 보았는데, 그러한 경향이 특별히 격렬해진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리고 무엇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실패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획득을 겪으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극심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수·우파의 재기와 혁신을 꾀하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흐름이었던 ‘뉴라이트’ 세력이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관념을 발전시키고 확산시켰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담론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뉴라이트 운동은 노무현 정부 하반기인 2000년대 중반에 한국 우파 재편의 핵심 흐름으로 부상했는데,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내건 운동과 단체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 해도 거기에 가담한 집단이 이후 한국사회의 여러 부문에 공격적인 우파, 나아가 극우 세력을 구축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동기에 뉴라이트의 조직적 기반은 전국적 범위의 여러 연합체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가장 큰 규모의 우익 단체 연합체로 평가되었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2005년에 창립되어 단기간에 많은 임원과 회원, 활동가를 확보하면서 전국적 산하조직과 직능조직을 구축했다. 반공반북 데모에 국한되었던 낡은 극우 단체들과 달리, 뉴라이트 연합체는 여러 의제별 기구를 두어 외교안보, 정치, 경제, 언론, 복지, 교육, 노동 영역 전반에 개입하려 했다. 한편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 싱크넷, 교과서포럼 등이 결합한 뉴라이트 네트워크 역시 학부모, 교사 단체까지 포괄하면서 광범한 연결망을 형성했다. 이러한 연합체들과 더불어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 자원이 풍부한 개별 단체들도 강경보수 시민운동과 친기업 반노동 담론 생산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뉴라이트의 조직적 외연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위와 같이 ‘뉴라이트’는 단일 조직이나 단결된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개인, 집단,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러한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뉴라이트 구성원이 큰 틀에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표방한 사상과 노선의 방향성이 있었다. 뉴라이트의 대외 노선은 반북주의, 한미일 동맹 중시, 흡수통일론으로 요약되며, 국내 정치에서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제적으로는 친기업 반노동 성장주의 시장경제론을 내세웠고, 역사 인식에서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박정희 재평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 태동기에 뉴라이트 내부에는 크게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의식과 전략적 지향이 공존했다. 하나는 독재를 자행하거나 거기에 협력한 과거를 가진 한국 보수가 민주화 이후에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는 성찰적 흐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 세력 및 진보좌파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공세를 통해 민주화 이후 위협받은 지배권과 헤게모니를 탈환해야 한다는 호전적 흐름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자가 보수의 실제적 혁신을 이루지 못한 반면, 후자는 독재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신자유주의 논리와 결합한 극우 세력을 형성하여 이후 뉴라이트의 주도권을 잡았다.

뉴라이트 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지속된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운동이 주로 전현직 고위관료, 판검사, 군 장성, 교수, 언론인, 목사 등 사회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나라당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직, 공공기관장으로 권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가 극도로 이념화, 권력화됨에 따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뉴라이트라는 명칭 자체가 비난의 뜻을 담은 일종의 멸칭처럼 되었고, 그에 따라 뉴라이트 임원이나 활동가들은 이후에 뉴라이트 대신에 '자유', '보수', '애국' 등 미화하는 단어를 간판에 내세운 단체들로 활동했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과 조직의 형태로 세력을 이어온 뉴라이트의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국가 권력 핵심부와 각종 공공기관으로의 인사 등용을 통해 제도권 내부에서 더욱 공고히 권력화되었다.

2) '자유민주주의 극우'의 반자유, 반민주 논리

뉴라이트의 이념과 담론이 모두 극단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극단주의가 뉴라이트의 주도권을 쥔 것도 아니었다. 일례로, 2000년대부터 정치권과 공론장에서 활발히 토론된 '공동체 자유주의'(박세일, 2006, 2008)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기초하여 한편으로 '구우파'의 이기적 개인주의, 최소정부론, 시장절대주의에 반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좌파'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성장과 효율의 경시, 역사와 전통 무시를 교정하는, 종합적 비전을 모색하였다(박세일, 2006, 2008). 그러나, 뉴라이트 진영의 이념과 담론에서 점차로 전면에 나선 것은 과격우파 또는 심지어 극단우파 관점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강력히 표방했는데, 평등, 분배, 인권을 강조하는 진영을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독재적 억압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등 실제로는 반자유, 반민주 성격이 강했다.

(a) 반공반북 체제수호론: 반공반북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론은 권위주의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민주주의 하에서 그것의 정당성을 보전하려는 시도다. 그 대표자는 박효종(2007)이다. 박효종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혹은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그것은 "동 의와 설득에 의한 지배", "자신들의 운명을 합의나 설득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체" 등을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이자 자기정체성을 뜻하기도 하지만(박효종, 2007: 82, 83), 그의 주장의 진정한 핵심은 한국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는 그가 말하는 세 가지 근본가치를 "내면화 혹은 표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첫째, 건국: 북한 공산독재에 맞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를 긍정해야 한다. 둘째, 반북: "북한식 전체정 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져야 한다. 셋째, 시장: 기업가정신, 주인 의식, 책임의식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박효종, 2007: 139-164).

특히 강조되는 것은 반공반북의 애국적 정체성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지상주의"나 '자유주의 전통'에 나오는 자유보다는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나오는 자유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건설자들은 북한을 제외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는 일도 불사했던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대한민국에 실현하고자 했던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어떤 민주주의냐, 그것은 과연 실현되었느냐라는 실질적 질문으로 들어가길 거부한다. 그 대신 그는 "우리 시대의 근본적 정치 문제를 '전체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파악한 간명하고 명쾌한 시도의 매력"을 상기시킨다(박효종, 2007: 85, 89-90).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가 아니며, 거기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며,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는 "6.25의 참상을 통해 ... '강성 반공주의(hard anti-communism)'는 여야는 물론 민심과 언론 및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가치관이 되었다. ... 전체정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등뼈(backbone)'로 작용해왔"(박효종, 2007: 108)다고 주장하면서 군부독재 시대를 정당화했다. 그에 반해,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다. "선거민주주의'는 성공했지만 자유주의는 꽃피지 못했다 .. 오히려 더욱더 위축되었다. ... 여기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주도한 좌파 진보 성향의 정치 세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박효종, 2007: 77, 78) 민주주의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정치공동체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제인데, 그는 한국의 "좌파 진보" 전체를 "반자유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반외세"/"반미"/"친북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면서 정치공동체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였다(박효종, 2007: 92, 93, 97)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주장이 반자유주의적인 사상통제의 이데올로기로 되는 지점이다.

박효종의 자유민주주의가 흥미로운 것은 반공반북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난점과 자기모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자율,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애국적 충성을 호소하지만(박효중, 2007: 98), 독재 정권이 자신의 권력 아래, 그리고 헌법 위에 올려놓은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반공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도에 무임승차하면서 반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제 메커니즘”이었다고 옹호한다(박효중, 2007: 106, 107).

(b) 신자유주의적 독재미화론: 자유시장주의(libertarianism)는 로쓰바드(Murray Rothbard), 노직(Robert Nozick) 등의 무정부주의뿐 아니라, 하이에크나 프리드먼(Milton Friedman)에 영향 받은 보다 온건한 입장을 함께 포함한다. 그중 자유시장지상주의는 ‘자유=시장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입장을 뜻한다. 경제단체나 보수시민단체의 담론 속에는 이런 자유시장주의 사고가 빈번하게 표현되지만 학계에서 이런 이념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는 철학자 신일철(2004)이다.

자유주의를 ‘의회민주주의, 복수정당제, ‘법의 지배’, 자유언론, 개인의 기본권인 자유권, 자유시장경제를 모두 포괄’한 근대 시민사회의 “문명전통”(신일철, 2004: 10)으로 규정한 그의 정의는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충분히 포괄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 나아가 그는 자유방임주의, 자유지상주의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여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옹호한다(신일철, 2004: 103-110). 그는 이처럼 자유시장지상주의자가 아님을, 자유시장지상주의자는 더욱 아님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지상주의자의 관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신일철은 “‘자유주의’와 ‘시장’은 21세기의 비전이요, 2대 키워드”(15)라고 주장하면서 자유가 전부가 아니고 시장이 곧 자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적 전통에 기초한 민영화, 자유시장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자체는 ‘극우’와 무관하며 다만 강경한 우파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대를 자유의 발전사로 평가하는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는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로 진단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이미 지난 100년, 특히 8.15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제도 속에서 그 최량의 성취물이 자연선택되고 축적된 시민사회, 자유시장질서 전통의 대명사”이며, 그 역사에 대한 비판은 “이룩한 자생적 질서의 피땀어린 유산을 전면 무시하려는 진보패권의 오만”이라는 것이다(이상, 신일철, 2004: 9, 102).

(c)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나 체제가 있을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정치이념, 또는 선거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리버럴 민주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의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 즉 자유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 신념체계가 ‘실은’ 전체주의적일 수는 있다. 전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인정되는 사상으로 무장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인정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의 공식적 이념임을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 그러한 통제와 처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간주되는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그것이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이다.

복거일은 뉴라이트의 발흥기에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한 대표적인 작가였지만, 실은 그는 “사람이 지닌 밈(meme)들이 그를 지배하지 그가 밈들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밈은 주인이고 사람은 노예이다”라고 주장하여, 자유주의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인간 자율성의 부정을 드러내고 있었다(복거일, 2007: 68). 그런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좌파 밈”을 파내고 “자유주의 밈”을 넣는 전투를 호소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념의 전투를 의식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 전사들이 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족사회주의보다 나은 이념이 나와서 사람들의 뇌에서 민족사회주의가 차지한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 비로소 민족사회주의의 확산이 멈출 것이다. ... 이념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일반 대중이 그런 양상에서 이념의 실체를 도출해내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복거일, 2007: 69)

이처럼 전체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우익 행동주의는 오늘날 빈번해진 ‘극우 집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적 구호가 되어 있다. ‘태극기부대의 집회 현장에는 대한민국을 ‘점령’한 자유민주주의의 ‘적’을 모조리 ‘처단하자’는 플래카드가 가득하며,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선창을 수 만명의 악의 없는 집회 참여 시민들이 따라 외치는 장면이 연출된다. 12·3 친위쿠데타 후에 윤석열과 내란 주도자들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에 의해 의식이 지배되어 온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궤변, 대한민국의 정부, 선

관위, 법원, 언론, 학계, 교육이 모조리 '중공공산당, 북한간첩에 점령'되어 있다는 음모론도, 그 저변에는 북거일의 '뭍 전투'와 동일한 전체주의적, 반민주적, 반자유적 인간관과 세계관이 깔려 있다.

6. 결론

현대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세력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였다. 그들이 추구한 자유와 평등은 달랐고 가치의 경중도 동일하지 않았지만, 자유주의는 만인의 평등한 자유를 지향했고 사회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이념이었고, 사민주의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발전한 이념이자 정치 노선이었다. 양자는 서로에게 단지 공존하기 위해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동반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만남도 그저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절충이 아니라 '가치의 대화'로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들을 공격하는 극단주의 논리와 행동은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합의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극우, 즉 우익 극단주의는 결코 보수주의나 우파 자유주의가 과격해진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가치와 규범의 근본적 부정이며, 오직 그들 자신의 권력과 이윤의 욕망, 증오와 불안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고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 '자유민주주의', '애국보수', '구국'과 같은 성스러운 상징의 옷을 걸치는 것 뿐이다. 것처럼 언어를 교란하고 인식을 혼탁하게 만드는 극우주의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곰베르트, 토비아스, 외. 2012.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한상의 옮김. 한울.
- 박세일. 2006.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21세기 북스.
- 박세일. 2008. 대한민국 국가전략. 21세기 북스.
- 박효종. 2007. "한국의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복거일 외. 한국의 자유주의. 자유기업원, pp. 75-185.
- 복거일. 1990. 현실과 지향 -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 문학과지성사.
- 복거일. 2007. "자유주의의 진화와 미래". 복거일 외. 한국의 자유주의. 서울: 자유기업원, pp. 13-73.
- 신일철. 2004. 뉴라이트와 시장의 철학. FKI미디어.
- 신지호. 2006. 뉴라이트의 세상읽기. 기파랑.
- 신진욱. 2008. "보수단체 이데올로기의 개념 구조, 2000~2006: 반공, 보수, 시장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8: 163-193.
- 심지연. 2009.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 이한우. 2005. "한국 자유주의와 <조선일보>." 박효종 외.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바오, pp. 111-143.
- Barber, Nicholas W. 2003. "The *Rechtsstaat* and the Rule of Law." in: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53: 443-454.
- Brühlmeier, Daniel. 1996. "Die Geburt der Sozialwissenschaft aus dem Geiste der Moralwissenschaft." in: Daniel Brühlmeier, Helmut Holzhey, and Vilem Mudroch (ed.). *Schottische Aufklärung*. Berlin: Akademie Verlag, pp. 23-38.
- Enste, Dominik. 2006. Soziale Marktwirtschaft aus ordnungspolitischer Sicht: in Anlehnung an Walter Euckens"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Roman-Herzog-Institut.
- Esping-Andersen, Gøsta. 1985. *Politics against Market. The Social Democratic Roads to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rguson, Adam. 1995[1767].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edited by Fania Oz-Salzberg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uson, Adam. 1995[1792]. *Principles of Moral and Political Science, Vol. 1*. Hildesheim, Zürich, and New York: Olms.
- Goldschmidt, N. and M. Wohlgemuth. 2008. "Social Market Economy: origin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in: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19(3): 261-276.
- Gordon, David. 1987. "Libertarianism." in: David Miller (ed.), *Blackwell Encyclopedia of Political Thought*,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1987, pp. 289-291.
- Gould-Davies, Nigel. 1999. "Rethinking the Role of Ideology in International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in: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1): 90-109.
- von Hayek, Friedrich August. 1994[1963]. "Arten der Ordnung." in: F. A. v. Hayek. *Freiburger Studien. Gesammelte Aufsätz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pp. 32-46.
- Hume, David. 1957[1748]. *An I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ited by Charles W. Hendel. New York: The Liberal Arts Press.
- Infantino, Lorenzo. 1998. *Individualism in Modern Thought. From Adam Smith to Haye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assalle, Ferdinand. 1919[1862]. "Das Arbeiter-Programm." in: Eduard Bernstein (ed.), *Ferdinand Lassalle: 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 Vol.2*, Berlin: Paul Cassirer, pp. 147-202.
- Locke, John. 1988[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dhurst, Martin J. 1997. "Eisenhower and the Crusade for Freedom: The Rhetorical Origins of a Cold War Campaign." i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7(4): 646-661.
- Meyer, Thomas. 2009. *Was ist Demokratie? Eine diskursive Einführ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Müller-Armack, A. 1978.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n Economic and Social Order." in: *Review of Social Economy* 36(3): 325-331.
- Trägårdh, Lars (ed.). 2007. *State and Civil Society in Northern Europe: The Swedish Model Reconsidered*.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Weber, Max. 1988[1919]. "Wissenschaft als Beruf." in: 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edited by Johannes Winckelmann, 7/e, Tübingen: J.B.C Mohr (Paul Siebeck), pp. 582-613.